

투데이 칼럼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에 바란다

재검토 준비단은 고준위 핵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교한 틀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향후 공론화는 원전 부지에 핵폐기물 임시 전식저장시설 설치 여부를 지역주민이 결정하게 하는 지역단위공론화와 영구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전국단위공론화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검토준비단은 2018년 5월 한국감동회화장인 은재호 단장을 포함 위원 15명(정부추천, 원전지역5, 시민사회3, 원자력3)으로 구성되어 최장 올해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그런데 준비단 회의 때마다 지역단위공론화에 참여할 지역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원전소재지역과 정부측, 원자력측은 임시 전식저장시설이 들어설 경우 가장 피해에 민감하고 수혜성 성격의 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는 원전 반경 5km 이내 주민 위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민사회측 위원들은 「방사능방재대책법」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이내 주민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주장하는 근거로 5km 이내 주민의 경우 지역단위공론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원전 반경 30km 이내 주민의 경우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기타 일반 국민과 5km 이내 주민 사이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필자는 아래 3가지 이유로 안전에 있어 임시전식저장시설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으므로 지역단위공론화에 30km 이내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부지를 언제까지 선정하겠다는 보장을 확실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임시 전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이 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둘째, 임시전식저장시설은 500미터 바위 동굴 속에 보관하는 영구



전 민 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처분장과는 달리 세상과 격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식저장시설이 설립 안전성이 높다 해도 수많은 세월 동안 대기 중에 노출되는 과정에 있어 위험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셋째, 임시전식저장시설은 원전 발전소와 동일 부지에 설치됨으로써 두 시설간 시너지 효과로 원전 전체 위험성을 상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소 50년 이상 수명은 세월 동안 핵 폐기물이 보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주민 범위는 단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범위와 유무형의 외부불경제 피해에 노출되는 공동운영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핵폐기물 공론화는 72억원이라는 거액을 사용하고도 의견 수렴 방식에 결정적 문제가 드러나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다.

이번 재검토 준비단은 기초 설계를 튼튼히 하여 뒤에는 공론화가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주길 기대해 본다.

사설

스마트 농생명 산업 성공해야

전북도가 농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뛰는 모습이 보기 좋다. 스마트 농생명 산업에 대한 출구 전략 포부가 그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스마트 농생명 산업은 대통령의 전북 공약 1호이기도 한 까닭에 배경이 든든하다. 무슨 현안이고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서 귀농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것 또한 반가운 일이다. 귀농 인구의 증가는 전북 농업의 앞날을 밝게 하는 원동력이 될 터이다.

거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무엇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농생명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도지사가 늘 그렇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활성화는 사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북도민에게 말했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그래서 스마트 농생명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12개 핵심사업과 그 투자 규모를 밝혔을 터이다. 엄청난 액수의 투자 규모로 보아 스마트 농생명 산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우리 전북 지역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리라 기대한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농도이면서 웰빙 고장이라고 여러 차례 공표해왔다. 그런데 웰빙 고장이 아니라 비웰빙 고장으로 나가는 현상이다. 우리 농촌 지역의 총소득은 전국과 비교해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전북도가 무슨 일이고 힘을 쏟는 주목적 뚜렷해야 한다. 전북도가 귀농 젊은이들을 챙기는 것은 농가의 소득 증대의 바탕 위에서야 한다. 이야기도 다. 그래서 여기 또다시 강조해 당부한다. 전북도는 스마트농생명 산업의 성공을 도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기를 바란다.

전북도는 농업 발전 의지를 다져야 한다. 농가의 요구를 주요 현안으로 끌어올려 반드시 성취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한다. 현재까지 전북도는 그것을 잘 해내고 있다. 영농정책 지원에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음은 전북도의 정책이 신뢰와 공감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귀농 청년들을 농촌의 보배로 키워야 한다. 그것도 한시적이 아니라 꾸준한 지속적인 그래야 한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가 존속되거나 증가하는 쪽으로 힘을 받을 터이다. 도지사는 저번에 "전북의 미래 먹

독자제언

건제와 균형적인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을 위해 가는 길

수사구조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사(경찰)와 기소(검찰)를 분리할 요구하는 여론이 70%를 육박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통을 거듭하던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된 수사권 조정의 합의문과 살펴본다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합의된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살펴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결정권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결정권' 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긴 하였으나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안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안수

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형식적인 합의문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중요한 것은 수사구조개혁에 있어 어떤 기관에게 권한이 더 주어지는지가 아니라 모든 수사과정이 국민들에게 편익과 인권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가 복잡해지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수사권 조정안은 국민이 아닌 자칫 두 기관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이중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경찰과 검찰의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개혁으로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에게 이익될 수 있게 할 방안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효과적인 범죄 대응이 가능한 수사권구조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소순관순창경찰서 수사과장 경감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MLB '명예의 전당' 입회식



3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쿠퍼스타운의 클리프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2018 미국 메이저리그(MLB) '명예의 전당' 입회식에 참가한 블라디미르 게레로(43), 트레버 호프먼(51), 치퍼 존스(46), 앨런 트래벌(80), 잭 모리스(63), 짐 토미(48)가 명판을 들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전북형 일자리 현황이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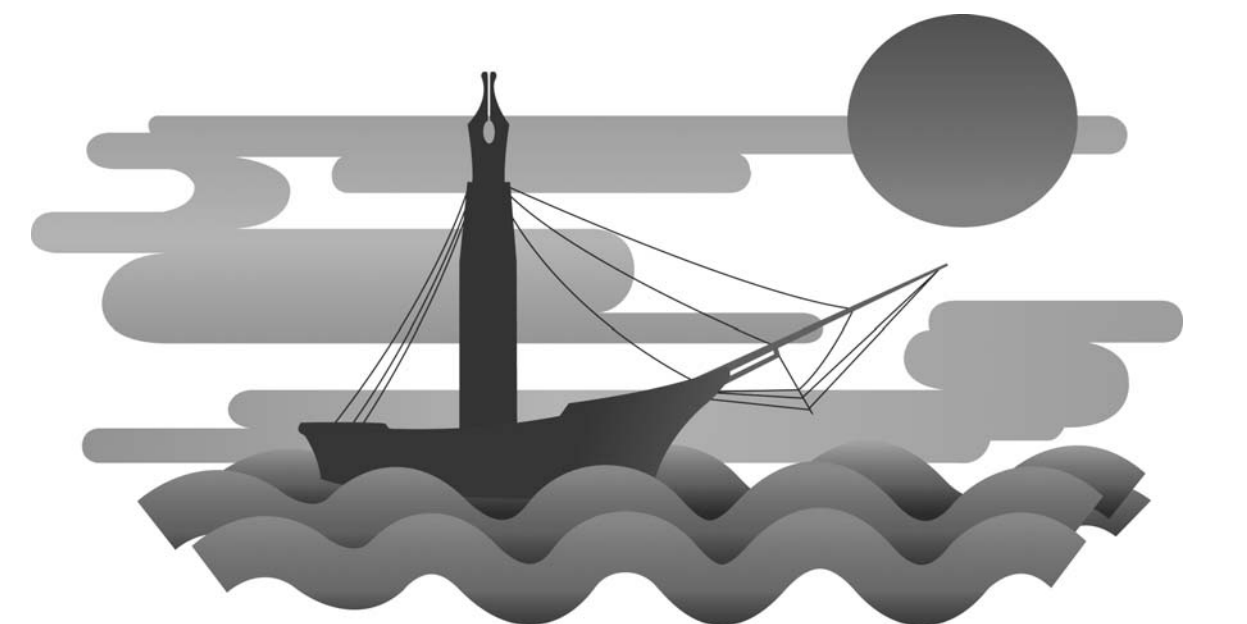
전국형 일자리 현황이 궁금하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이다. 도내 언론사들이 합동으로 조사한 바에서 드러나듯 도민들의 우선적으로 바라는 바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같은 바를 주목은 결국 전북도가 지역의 경제 부흥에 시선을 고정시켜 의욕을 다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번에 물어보았던 것을 또다시 물어보려고 한다. 정부의 지역형 일자리 방안과 관련해 확실히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기 쪽으로 많은 예산을 가져가려고 한 것이기에 치욕하게 경쟁해야 한다. 지방에 도지사는 각 실·국·청과 일자리 전문가들이 참석 한 자리에서 일자리 100만 창출을 말했다고,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 일자리' 등 4대 전략을 말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지원책'을 말했다고, '청년 내일 일자리 채용공제'의 도입을 말했다. 그게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정부의 기초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와 연구의 고용 위기자들을 위해서 3조5천억 원을 쏟아고 했다. 전북도는 청년일자리 창출 성공을 위해 계획이 차질 해왔다. 전북도는 전인 정부 때 도내 일자리 창출의 실적평가 좋지 않았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공약 시도와 비교해 부연가 부족 한 실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이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섰지만 젊은이들로부터 젊은 소리가 나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에 따라 전북도가 여러 번 강조해 왔었던 바 전북형 일자리 찾기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고용위기 지역 도시들도

전북도는 군산시의 남원시등 고용위기 지역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기가재 일자리에 송사하는 이들도 바라는 바는 현실적이다. 그것은 관공은 일자리이다. 본보는 도내 젊은이들 중 40%가 남계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고민한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전북도는 취직 자리 구하기가 목이 마른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군산과 남원은 내 말할 내용이 없고 도내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다. 전북형 일자리 사업은 계속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격려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